민주 "檢 국면전환 정치쇼" 국힘 "대표 수행 어려워"

'이재명 기소' 극명한 입장 차

여야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극명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통한 국면전환용 정치쇼"라고 강력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당연한 기소"라며 "이 대표가 더 이상 대표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당 대표가 기소되자 "대장동 비리는 검찰 게이트"라며 "검찰의 부당하고 무도한 야당 대표 죽이기 기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망나니 칼춤이 기어코 '답정기소'에 이르렀다"며 "애초에 기소라는 답이 정해진 수사였고, 검찰은 오늘 답안지를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1년 반에 걸쳐 60여명의 검사를 투입해 수사에 올인했지만, 결과는 빈 수레만 요란하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큰소리치더니 핵심 혐의들은 모두 빠졌고 이렇다 할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났다"며 "검찰은 이 대표를 흠집 내고 피의자의 낙인을 찍었지만 법원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입장문을 내 "대일 굴종 외교와 주 69시간 노동개악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자 검찰이 앞장서 국면전환 정치쇼를 벌이는 모양"이라며 "이러니 정치검찰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시점에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예고하고, 언론에 공소장 내용을 슬슬 흘리며 다시 군불을 때고 있다"며 "검찰은 이제 그만 이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그릇된 집착을 버리라"고 경고했다.

당사자인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은 이미 8년 전 불거진 검찰 게이트다. 전혀 놀랄 일도 아니다"라며 "검찰의 이번 기소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추가 기소 가능성을 예고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혐의가 입증돼 기소된다는 뉴스를 봤는데, 매우 심각한 내용인 것 같다"며 "이 대표가 더 이상 민주당 대표를 수행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백현동 (특혜 의혹)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쌍방울(대북송금 사건), 이런 것들도 연관이 매우 짙은 증거들이 다 나와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왔다가 부결되니까 구속 기소는 할 수 없고, 불구속 기소하는 것 아니냐"며 "체포동의안이 올라올 정도니까 당연히 혐의를 갖춰서 기소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의혹을 전반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추가 기소됐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민주 "각 가정에, 차에 태극기 달자"

대일 외교 규탄 '태극기달기 운동'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규탄하면서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대일 굴종외교 규탄 태극기 달기 운동 행사를 열고 "태극기를 손에 들고 각 가정에 게양하며, 차에도 붙여 자주독립국임을 보여 달라"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일본이 과거 침략, 인권 침해에 대해 반성과 사죄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저자세로 조공을 바치듯 한일 회담을 해 온 데 대해 국민은 허탈해 하고 모욕감을 느낀다"며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훼손하는 이해할 수 없는 국가원수의 행동, 일본을 위한 대통령인지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인지 국민이 헷갈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시 대한민국이 자주독립국임을, 정부는 국민과 대한민국 자체를 위한 존재임을 증명해 가야 한다"며 태극기 달기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일 굴종 외교 규탄 태극기 달기 운동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낙연 "한·일 정상회담, 새로운 위기 조성"

SNS "국민 분노는 그 방법 때문"

이낙연(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정부의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양국 관계의 취약성과 양국 정부의 한계를 드러내며 새로운 위기를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일관계는 개선해야 한다. 다만 민족 정기와 보편적 정의, 삼권분립과 역대 정부의 입장도 살리면서 한일관계를 개선하도록 끝까지 노력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한국 측은 역사에 대한 얕은 지식과 치우친 인식, 국정에 대한 둔감과 속단으로 일을 그르쳤다"며 "일본 측은 진실을 호도하는 자기 중심적 역사 인식, 한국에 대한 감춰진 오만을 쓰나미처럼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귀국 후 한일관계 개선의 당위성을 길게 말했지만, 그 방법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우회했다"며 "국민의 당혹과 분노는 한일관계 개선 때문이 아니라, 그 방법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이 전 대표는 오는 6월 귀국할 예정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임선숙 "감사원, 한국에너지공대 감사 중단해야"

임선숙(사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 미래성장동력 발굴에 대한 업적을 훼손하기 위한 추악한 정치적 표적감사"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이 지난 8일부터 이달 말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설립된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젊은 에너지 인재들의 미래,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서슴없이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전공대'는 여야 합의하에 제정된 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립돼 일반적인 대학의 설립 기준을 적용해서 설립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은 억지"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감사 개시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 감사는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감사 개시를 결정하는 공익감사청구로 개시를 결정했다"며 "유병호 사무총장은 대통령실이 감사원을 배후 조종하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의심받는 사람이다. 감사가 대통령실의 의중에 따라 공익감사의 탈을 쓰고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인재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호남의 꿈을 담은 한전공대에 대한 정치적 표적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물가·금리·부동산·고용 '민생폭탄 대응단' 출범

주4.5일제 등 활동 전개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물가, 금리, 부동산, 고용 문제를 '민생 4대 폭탄'으로 규정하고, 당 내 기구 산하 분과별 조직을 구성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 산하에 민생 4대 폭탄 대응단을 출범시켰다.

물가 분과 단장은 고용진 의원, 금리 분과 단장은 유동수 의원, 부동산 분과 단장은 맹성규 의원, 고용 분과 단장은 김영진 의원이 맡았다.

이재명 대표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민생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며 "민생 해결에 무능한 정치는 존재 이유가 없고, 민생 고통을 방치하는 정치는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금리, 고용 문제, 물가, 전세사기를 포함한 부동산 문제를 좀 더 면밀하게 점검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응단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대응단은 4개 분야 관련 토론회, 정책 대안 마련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물가와 관련해선 냉난방비와 대중교통비 인상 등의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금리 분과는 긴급생계비 대출 부담 완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 등을 마련한다.

부동산 분과는 전·월세 사고 지역 점검과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용 분야에선 주69시간 논란이 있는 노동시간 개편 논의 대응과 더불어 주4.5일제 관련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한 총리 "광주·전남 가뭄 범정부 지원… 장기 대책 마련할 것"

세계 물의 날 기념식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광주와 전남 등 남부지방의 가뭄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 참석, "정부는 남부지방의 가뭄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해수 담수화를 비롯한 대체 수자원 개발과 전국의 물 공급망 연결 등 중장기 가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의 위기가 지구촌 곳곳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도 더욱 속도감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결코 예외일 수는 없다"며 "지금도 광주·전남을 비롯한 남부지방은 9개월째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생활용수 제한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깨끗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섬과 농어촌 지역까지 안전한 물이 공급되도록 노후 상수도 정비, 식수원 개발 등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스마트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 가뭄과 홍수에 대한 첨단 예보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